제3회 규제합리화위원회
지역분과위원회 회의록

2026. 5. 22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6. 5. 22. (금) 14:00

○ 출석위원(11명)

○ 민간위원(9명)

- 이병태, 고동수, 고은아, 권태성, 김기명, 우윤석, 이민창, 정상훈, 정은미, 최상한

○ 정부위원(2명)

- 국조실, 농식품부

Ⅱ. 상정안건

연번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분
①	2026-129	교육부	’26년도 교육부 소관 규제정비 종합계획	보고
②	2026-130	교육부	대학 평가·인증 현황 및 개선방안	보고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2026년 교육부 규제 정비계획(교육부, 2026-129호)

□ 보고내용 (요약)

○ 2025년 주요 성과

- 5세 무상교육·보육 지원('27년 3~5세까지 단계적 지원)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허용
-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

○ 2026년 기존규제 정비 추진방향

- AI 등 인재양성을 위한 신산업·고등교육 혁신 규제 개선
- 지역·대학 균형성장 기반 규제 정비
- 학생·교원·국민 체감형 민생규제 합리화

○ 2026년 핵심 정비과제 이행상황

- 적정규모학교 권고기준 폐지 및 지역 맞춤형 학교 규모 기준 마련
-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통합학교 운영 특례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
- 폐교 활용 행정 절차 단축, 무상대부 등 특례 확대 개정 추진
- 교습비 초과징수·무등록 교습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
- 학·석·박 통합과정 근거 마련으로 고급인재 조기 양성 지원
- 경영위기대학 대상 적립금·재산처분·통폐합 규제 완화

□ 논의내용

○ 지역 맞춤형 학교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,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통합학교 운영 특례 및 초·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논의

□ 보고결과 : 원안대로 접수

2. (보고) 대학 평가·인증 현황 및 개선 방안(교육부, 2026-130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배경 및 경과**

- **대학 평가·인증 제도 도입** 이후, 행정 환경 및 고등교육 평가 체계 등 **관련 법·제도의 변화***에 따른 **제도개선** 필요성

* 의료과정 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('12),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('25) 등

- 동 제도 개선과 함께 **대학이 수검하는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 및 학생 보호** 등 향후 **대학 평가 합리화 방향**을 모색할 필요

○ **대학평가 현황 및 시사점**

- **기본 질 보증 평가**(대학 자체평가 등), **전문 분야 인증**(의학 등 10개 분야별 인증), **재정지원 연계 평가**(대학혁신지원사업 등), **주요 법정 평가**(청렴도 평가 등)

- **재정지원 연계** 등 **평가 결과 활용이 대학과 학생에 직접적인 영향**을 미치며, 목적과 기능이 다른 각종 평가가 **현장에서는 하나의 "수검 부담"으로 체감**

○ **과제 및 향후 계획**

- **(과제) 평가·인증 법령 정비,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, 평가 인증 통합 지원체계 마련, 평가 합리화 과제 발굴·개선**

- **(향후 계획)** 대학 평가·인증 **시행령 개정** 추진('26.6월~), **2026 대학 평가 총람** 발간('26.11월) 및 대학 평가 합리화를 **지원 정책 개발 연구** 추진('26.4분기)

□ **논의내용**

○ **평가·인증**이 **대학**의 **혁신역량**에 **소모적 요소**로 작동하지 않도록 **현황**을 **진단**하고 **평가 제도 정비** 및 **합리적 정책 방향**을 **논의**

□ **보고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